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자동차로 세 시간 삼십 분쯤 달려 서이천 IC로 들어서자 큼직한 홍보 조형물이 눈에 띈다. 연한 갈색톤의 도자기 모양이 여타 도시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도심이 가까워지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분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주요 도로에는 도자기 가로등이 은은한 자태를 뽐내고, 도로를 가로 지르는 육교에는 형형색색의 도자기 조형물이 내걸렸다. 무엇보다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의 ‘실체’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은 도자문화 복합공간인 세라피아였다. 이전의 명승지인 설봉공원에 자리한 세라피아는 지난 2001년 세계 도자기엑스포 개막에 맞춰 문을 연 이후 경기 세계 도자비엔날레와 이천 도자기축제의 발신지가 됐다. 세라피아는 도자기를 의미하는 ‘세라믹’과 낙원을 뜻하는 ‘유토피아’의 합성어다. 설봉공원에는 세계 도자비엔날레와 도자기엑스포의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조각 작품과 도자기 소재로 제작된 벤치나 테이블이 즐비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교육·체험 전용 공간인 ‘세라피아 창조센터’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만 같진 않겠

‘슬기로운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용자’

지만, 도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름 그대로 ‘도자기 천국’이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에 가입된 이후 10년간 도자축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陶磁) 도시의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었기에 이런 천국이 가능했을 것이다.

도자기 천국 이천시의 경우

이제는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또 다른 창의도시 경남 통영으로 가 보자.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된 통영시는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로 불리는 통영국제음악제(TIMF)를 매개로 도시 전역에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퍼뜨리는 ‘음악의 일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통영이 음악 창의 도시로 성장한 데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미래 세대들을 겨냥한 예술 교육의 힘이 컸다. 통영시는 TIMF의 주무대인 통영 국제음악당을 기반으로 특화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TIMF의 무대에 서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분공원에 앞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쿨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해 평균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콘서트에 초대된다고 하니 통영의 음악 지면이 얼마나 탄탄한지 짐작이 간다. 올해는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6주년이 되는 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명칭은 문학·음악·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아트·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을 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도시에 부

여된다. 현재 광주·서울·부산 등 국내 10개 도시를 포함 80개국 24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지난 2014년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미디어아트 도시라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이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사업단을 주축으로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핵심 시설인 에이엠티(AMT : Art and Media Technology)작공과 홀로그램 극장 오픈, 유네스코 창의벨트 추진 등 인프라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최근 창의 도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본계획 및 2020시행계획 수립’과 ‘AMT 센터 운영 방안’ 등 핵심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향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방향과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예술이 일상에 스며들어야

광주시는 컨설팅 회사 ‘더킹핀’이 제안한 ‘시민의 일상에 스민 창의도시’, ‘사람·예술·산업을 빛나는 창의도시’, ‘시민과 함께 세계로’ 등 세 개의 비전안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곧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라는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추구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단기 목표표 산업화에 무게를 둘 경우 시민 향유나 교류 활동보다는 성과 중심의 사업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 개의 비전안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완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핵심 퍼즐 조각이다. 따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어느 하나만을 중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지속 가능한 창의도시를 위해서는 광주시의 명확한 비전과 장·단기 로드맵이 하루 빨리 제시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시민과 미디어아트의 접점을 찾는 창의도시의 일상화는 매우 시급하다. 미디어아트라는 생소한 장르에 머뭇거리려는 대중을 대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예술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컬렉터가 미술 시장의 흥행을 좌우하듯, 창의도시의 성공 역시 미디어아트에 ‘눈을 뜬’ 시민들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킹핀’이 지역의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낮은 인식을 창의도시 사업의 걸림돌로 꼽았다. 또한 ‘과정’보다 ‘결과’ 위주의 전시행정이 걸림돌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시민들이 내 공간이라는 인식, 내가 즐기는 전시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전 세계 최고의 미디어아트센터 독일 ZKM의 한 디렉터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건넨 메시지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지 않은가. 눈치 빠른 이라면 이미 답을 알 것 같긴 하다. 광주시의 ‘슬기로운 선택’을 기대한다.

은폐칼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영향



강대석
시안·행정학 박사

요즘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 단독 처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보호를 위해 시급한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협치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였다. 전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써서 집값을 안정시켜 놓으면 다음 정부는 경제를 살리라며 규제를 풀어 부양을 하고 그 다음 정부는 다시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반복되었다. 그 사이 서울의 집값은 정책의 파고를 타고 예외 없이 뛰었다.

역대 정부 중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선 각자적 모델을 제시한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노태우 정부였다. 토지 공개념 3법인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주택 200만 호를 건설했다. 88올림픽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였지만 획기적이었다. 토지 공개념 3법은 나중에 위한 판결을 받았으나 만약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사라졌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취임 초 금융 실명제와 함께 토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정책을 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 위기 속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며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전매 제한을 풀어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얼어붙은 경기는 부양되지 않았고 IMF 외환 위기로 피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를 넘겨받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에 올인했다. 위한 판결을 받은 택지 소유 상한제와 함께 토지 거래 신고제와 토지초과 이득세를 폐지하고 외자 유치

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대외에 개방했다. 이어서 양도세 완화와 다주택자 청약 제한 금지 해제 등의 규제를 풀었다. 덕분에 IMF 외환 위기는 조기에 졸업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시장은 옹골로 되었다. 두 정부의 부양 정책으로 축적된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 16.4%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시장의 불길 잡기에 바빴다. 종합 부동산세를 도입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를 꺼내 들였다.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 실시, 분양원가 공개, 종부세 중과 등 금융·세제·공급 등의 온갖 대책을 총동원하여 임기 말에야 겨우 불길을 잡았다. 5년의 마라톤 끝에 부동산 시장은 겨우 진정되었지만 민심은 보수로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물려받았다. 초기에는 반값 아파트 공약 등도 추진했지만 곧 수도권 밀려 부양 정책을 펼치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종부세·양도세를 완화하며 전

매 제한까지 풀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 걸음 더나가 분양가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 환수제, 재건축 공급 제한 등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대출 한도는 올리고 이자율을 내려주면서 ‘빛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박근혜 정부 4년은 ‘갭 투자’와 전매 투기의 천국이었다. 보수 정부 9년 동안 고삐 풀린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의 정점을 찍으며 문재인 정부로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투기 세력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칼은 무뎠다. 강남을 치면 수도권으로 튀고 수도권을 치면 지방으로 튀었다. 문재인 정부의 상황은 노무현 정부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 전 정부에서 기친 영향을 진화하기에 바쁜 형국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와 부양을 반복하는 정책으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토지 공개념을 법제화하여 주택이 투기의 수단인 아닌 거주 수단임을 명확히 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기고

다람쥐의 나무 심기



박영길
영암 국유림관리소장

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에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는 물 빠짐 등 지형이나 토질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주변 나무들이 참나무류와 같은 심근성 수종들이 많은 지역보다는 뿌리가 얇게 뻗는 친근성 수종들이 있는 곳에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산에 나무 심는 방법 중에 어린 묘목을 심는 대신 종자를 직접 심는 방법도 있다. 바로 직파(直播) 조림이다. 산에 직접 종자를 심어 자연 발아를 유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1~4년이 걸리는 묘목을 기우는 시간을 줄여 양묘에 파

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무거운 묘목을 현장까지 옮겨 심어야 하는 비용도 많이 절감된다. 특히 흙이 적고 돌이 많은 석력 지대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묘된 묘목을 심어 활착시기가 쉽지 않지만 직파 조림은 이런 험준한 곳에서도 활착이 잘되니 일석삼조의 조림 방법이다. 직파 조림은 황폐한 복합의 산림 복구에 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직파 조림이 성공한 조림지는 많지 않다. 직파 조림에 복병이 하나 있으니 바로 다람쥐다. 다람쥐들은 조림 예정지 작업을 마치고 직파 조림을 한 곳을 찾아내 흙을 파헤치고 도토리 종자를 입에 가득 불이 터져라 물고 자기들만의 비밀 창고로 옮겨 놓곤 한다. 다람쥐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기도 한다. 파종지에 종자를 한 개만 넣지 않고 3~5개의 도토리를 일정 간격으로 묻기도 하고 다람쥐가 싫어하는 화학 약품을 종자에 바르거나 조림된 도토리를 보호하려고 페트병이나

막걸리병을 잘라 씌우기도 한다. 또 플라스틱 파이프를 박거나 그물망을 만들어 조림 종자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지만 직파 조림 후 며칠 후에 가보면 페트병이나 막걸리병은 바람에 날려가 오히려 주우러 다니기 바쁘고 고약한 냄새를 내는 화학 약품 처리 종자는 며칠만에 냄새가 없어지고 만다. 플라스틱 파이프나 그물망은 영리한 다람쥐가 주변 흙을 파헤치고 들어가 종자를 훔쳐 간다. 오히려 이런 표시들이 도토리 위치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 같다. 그러나 이런 영리한 다람쥐도 단점이 하나 있으니 기억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영리하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훔쳐온 도토리를 분산 투사하여 저장해 놓고는 그 위치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겨우내 일부 기억하는 종자는 다람쥐가 식량으로 먹고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저장한 도토리는 인간과 다람쥐의 의도와 다른 전혀 다른 곳에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나서 숲을 이루

게 된다. 이렇게 나무 심는 다람쥐도 산림 생태계의 일부가 된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 원인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새로운 질병과 집중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도심권 주변에 매미나방이나 꽃매미 등이 대량 출몰하여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나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집중 호우가 계속되어 물난리를 초래하는 이상 기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류 문명의 앞에는 숲이 있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따른다”는 유명한 작家的 말처럼 우리가 자연환경과 산림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社說

의대 유치 동·서 경쟁보다 상생 방안 찾아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엇그제 ‘의과대학 역할 및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 접적으로 순천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설될 의대의 동부권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순천대 박기영 대학원장은 “동부권은 상급종합병원 하나도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면서 “지역 중심 국립대학 중에서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 지역에 위치한 곳에 의과대학을 최우선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익 의원은 지난 6월 목포대 의대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목포 의대 신설과 운영, 실현 등을 시민들과 의논했다”며 사실상 목포대 의대 유치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권 의대 유치의 산파로 평가받는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이 참석해 “교육부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8년 예산에 반

영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방침’ 발표를 전후로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앞다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역구 의대 신설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대 유치를 놓고 동·서 간 과열 경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신설될 의과대학이 목포대로 가느냐 순천대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건 의대 정원 최대 확보라는 점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말에 해당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100명 이상 확보해야 의대와 부속 병원을 동·서에 각각 설립하는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세울 수 있다.” 소모적인 동·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 과거 역대 정원 배정 때처럼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로해역 어업 분쟁 전남도가 적극 중재를

전국 최대 규모 김양식 어장인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마로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남 지역 김양식 어민 500여 명은 그제 열린 집회에서 “마로해역의 어업권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전남도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로해역 양식 어장 면허 면적은 총 1만 2000여ha로 이 중 진도 수역이 80%, 해남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점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양식을 하는 1370ha다. 이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처음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들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잇따랐다. 이후 양쪽 어민들이 어장 정리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 기간 만료와 함께 진도 어민들이 해남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법원은 분쟁 대상인 1370ha는 해

남 어민이 2020년까지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에는 1370ha의 신규 면허를 내주면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 어장 면허 기간이 도 다시 만료되면서 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해남 어민들은 “법원의 조정 결과는 면허 기간 갱신과는 상관없이 영구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도 어민들은 “해남 어민들에 대한 면허 기간이 끝난 만큼 어업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어업권은 어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여서 법적 잣대로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법적 판단이 아닌 조정 결정이 이뤄지도록 양측이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전남도는 진도·해남군과 함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양 지역 어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반도 중부권에 폭우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반면에 광주 등 남부 지역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이 우려될 정도다. 한반도 한쪽에서는 ‘폭염’이, 또 한쪽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상반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장마는 예년과 달리 더욱 길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최대 50일을 넘기는 곳도 있는 등 197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 기간이다. 기록적인 강수량, 여기에 한정된 지역 에만 내리는 ‘국지성 폭우’, 그리고 밤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많아지는 등 장마 패턴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기후 변화’란 기후의 평균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20세기 들어 지구의 기온 상승이 뚜렷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증감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평균기온이 1910~1930년대에 비해 약 1.5℃ 정도 상

승하고, 연평균 강수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온 상승에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다. 자연적 원인으로서는 대륙 이동에 의한 수목 분포 변화와 화산 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미립자 증가 등이 꼽힌다. 인위적 원인으로서는 대기 오염에 의한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 온실 기체 증가, 지니친 삼림 파괴, 도시의 열섬 현상 등이 있다. 기후 변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고되어 왔다. 1992년 6월에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리우 환경협약’이 만들어지고, 1997년 교토 의정서가 발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잠시 멈춤’이 지구촌 곳곳을 다시 살려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폭우와 홍수·폭염 등은 지구의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미래 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최원길 정치부 부장 cki@

기후 변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